

## 북한은 대남 긴장조성 협박 그만 두어야

조 민

통일정책연구실 실장

북한은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면서 대남 군사적 대응을 선언했다. 북한군은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과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 협박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된 전략으로 보인다.

### 북한, 전망의 상실

올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북한 당국의 위기의식과 전망의 상실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은 낙관적 정세전망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함께 경제회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성과보고 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전망은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노동당과 군부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개혁개방이 사회주의 포기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단행했지만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독재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에 대한 전면거부 의지를 밝히면서,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이 북한식의 고유한 경제건설 방식임을 내세웠다. 이에 사상분야의 총공세를 강조하면서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요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내적 자원의 고갈에다 외부 경제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이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나온 단말마에 불과하다.

###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장조성

북한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남 긴장을 적극적으로 고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제내부 요인으로 사상통제와 일심단결을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특히,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으로 군대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 선군정치의 폐해로 인민군은 이미 약탈군대로 변했다. 이는 “군풍을 철저히 세우고”라거나, “군사규율 확립, 인민군의 품격과 면모, 기강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데서 여실히 반증된다. 사실 인민군대의 기강해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군대의 기풍을 바로잡고 주민의 위기의식과 대남적개심 고취를 통한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국면 조성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북한은 후계자 세습 문제와 함께 3월 초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원회 개편작업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체제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식량 배급 등 물질적 혜택으로 주민의 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위기조성과 긴장고조를 통한 대중동원 방식 외

에 달리 선택할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대미 핵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 북한은 핵폐기를 위한 검증에 수용할 의사가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살아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고 하여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핵협상이 개시되면 북한은 현안인 검증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전술로, 핵군축 협상과 함께 평화협정 카드를 내밀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제의를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상황과 긴장국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남전략의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장조성으로 남한 당국의 굴복을 압박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을 획책할 수 있다. 군사적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론분열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서 남한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는 바,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할 것이라고 여겨 대북정책 전환을 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긴장 조성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북한은 17년 전에 ‘우리민족끼리’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2.19 발효)을 지켜야 한다. 핵폐기는 국제사회와의 합의이기에 앞서 우리민족 앞에 맺은 약속이다.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 두 합의문은 북한의 독점물이 아니며, 이를 빙자한 긴장 조성 협박은 언어도단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가 맺은 두 합의문을 존중한다면 남북한 양자가 이마를 맞대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긴장조성을 그만 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차분한 대응이 기대된다.

